

### “재벌주도 산업전환, 금속노조가 멈춘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 현장순회 3주 차 마쳐 ... 경남·한국지엠지부 조합원과 7월 총파업 공감대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장순회단’이 4월 21일 경남지부, 22일 한국지엠지부를 거쳐 숨 가쁜 3주 차 순회를 마무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현장순회단은 출근 선전전 등 지부, 지회 투쟁에 결합하며, 20만 총파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북돋웠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장순회단’은 4월 21일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간담회, 현대로템지회 간담회, 경남지부 선동학교 인사, 경남지부 교섭위원 간담회 등을 열고, 20만 총파업 조직을 독려했다.

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은 간담회에서 20만 총파업의 의미와 실현 경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20만 총파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두산중공업지회와 현대로템지회 조합원들은 6월 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조 현장순회단은 4월 22일 노조 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 출근 선전전을 한국지엠지부와 함께 하고, 지부 상무집행위원과 지부 대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출근 선전전에서 “한국지엠은 금속노조에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노조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지만, 한국지엠은 대상자 1,797명 가운데 260명만 탈락채용한다며 하청노동자 사이를 가르는 안을 제출했다”라고 분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일할 하청노동자를 착취하면서 공장을 유지해 왔다”라면서 “한국지엠의 악랄한 하청노동자 탄압에 대해 금속노조는 전면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노

조는 4월 27일 부평공장 앞에서 하청노동자 해고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노조 현장순회단은 지부 대회의실에서 상집 간부, 대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핵심 사업과

투쟁방침은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7월 20만 총파업이다”라며 “노조 전체 조합원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총파업으로 기선을 제압하지는 투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전동화 스마트 팩토리, 미래차 등 자동차 생산방식이 변화하는 산업전환 시점이다”라며 “한국 모든 산업에 걸친 산업전환을 재벌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7월 총파업으로 재벌 주도 산업전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면서 “총파업을 통해 금속노동자의 요구를 한국 사회에 던지고, 사회 쟁점화해 관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 윤석열 정부가 바꾸려는 노동자의 내일

## 1 노동시간 증가 (법개정 필요)

- ▶ 노동시간 규제는 연 단위 총 시간 기준으로
- ▶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규제 예외 업종 확대
-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나중에 쉬고 기업이 필요할 때 지금 많이 일하라는 제도



## 2 선택적근로시간제 확대 (법개정 필요)

- ▶ 1개월 평균 근로시간만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하루 근로시간 제한 없이 근무시킬 수 있는 제도
  - ▶ 현행 1~3개월 단위 운영, 향후 1년 단위로 근로시간 평균 맞추도록 변경, "노동자 자유이용권"
  - ▶ 선택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 : 직무나 부서별 노사합의만으로 가능하게 변화

## 3 직무성과급제 도입



- ▶ 연공급제 임금체계(현 노조 사업장의 65%)를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로 개편
- ▶ 근속연수 호봉 대신 직무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직급,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
- ▶ 정부가 공공부문을 먼저 개편, 민간/자본이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로(이명박근혜 정부 시즌2)
- ▶ 직무, 직군, 직급별로 쪼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로 임금체계 정할 수 있게 법 개정

## 4 노조 패싱(PASSING)?

- ▶ 직무/직급/부서 근로자 대표와의 노사합의 강조
- ▶ 노사협의회와의 협이가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관행 변경 시도
-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사실상 쟁의행위 규제